

‘대출 제동’ 저축은행, 유가증권 확대로 수익처 다변화

작년 말 유가증권 투자액 8.9조
지난 9월 12.5조 투자잔액 급증

SBI·웰컴 등 대형사 투자 확대
한성·폐페 등 중소형사는 줄어
‘투자한도 제한’에 투자 양극화

주요 저축은행이 대출 사업 대신 유
가증권 투자를 확대하며 수익을 올리
고 있다. 그렇지만 중소형사들은 규제
로 인해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에 따르면 79개사 저축은행의 지난 9월
기준 유가증권 투자 잔액은 12조5000
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8
조9000억원, 올해 3월 9조1000억원 규
모에 머물던 유가증권 투자금액은 6월
10조4000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한 뒤
9월 12조5000억원까지 불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정부의 대출 규
제 강화 기조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 6



/저축은행중앙회

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제1·2금융권 모두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고강도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내놓았다. 대출 사업 확장에 제약이 걸린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투자처인 증권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문제는 유가증권 투자 역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3분기 기준 SBI저축은행 유가증권 평균 잔액이 8742억원, 웰컴저축은행은 5485억원, 애큐온저축은행 4376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527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 중심의 중소형사들은 상황이 다르다. 대명저축은행은 3분기 기준 유가증권 평균 잔액이 46억원에 그쳤다. 융창저축은행은 95억원, 스타저축은행은 162억원, 대백저축은행은 182억원으로 확인됐다. 투자를 확대해도 대형사 투자액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유가증권 투자를 오히려 줄인 곳도 있다. 한성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액이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202억원)보다 잔액이 줄어 들었다. 폐페저축은행 역시 유가증권 투자액을 2028억원에서 1955억원으로 줄였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유가증권 투자 양극화 배경으로는 유가증권 투자 한도 제한 규정이 자리한다. 현재 당국은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기자본이 많은 대형사들은 유가증권 투자를 늘려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도 대안책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지만, 자기자본이 약한 중소형사들은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길이 뚜렷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한편,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증권 시장의 변동성으로 유가증권 투자 확대가 또 다른 부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수연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대출 축소에 따른 수익원 다각화 일환으로 유가증권 투자가 증가한 영향이 있다”면서도 “유가증권의 경우 주식 시장 등락에 따라 손익변동성이 높아질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신한카드 개인정보 19만건 유출 직원의 영업목적 일탈

신한카드에서도 약 19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약 19만건(19만2088건)이 신규 카드 모집에 이용되기 위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일부 내부 직원의 영업 목적 일탈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로 파악된 개인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 직원의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주담대 확정일자 정보연계 인터넷은행으로 확대

국토부, 카뱅·토스 등과 업무협약
내년 연계업무 완료기관 순차 적용
취약계층 보증금 보호 강화 기대

내년부터 집주인이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세입자의 확정일자 정보가 연계돼 한도에 반영케 된다.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지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대항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유토이미지

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도입해 11개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 계약을 한 뒤 바로 7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

까지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연계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임대인이 주택담보를 미리 받아 해당 대출은 선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 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대출을 해주기 전 한번 연계해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규제완화 연장

금융위, 내년 6월까지 연장 결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되며 시장 연착륙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 시기를 가늠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부실채권 정리 효과가 적고 실적도 미비한 1건(상호금융관련)을 제외한 9건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계부처들은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체율은 4.24%로 직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 잔액이 빠르게 감소한 가운데, 잔여 채권의 연체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농·수협 등 상호금융 PF대출 20% 제한

금융위, 제도 개선방안 확정

앞으로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총 대출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상호금융사 임원이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년 이상 다른 조합이나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장기 재임 방지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협의회가 건전성 약화, 금융사고 빈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과 소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만에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라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고, 지역의 소상공인 등에게 적정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이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소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한화 건설부문 전국 건설현장서 '겨울 간식차' 운영

한화 건설부문은 겨울철 한화 속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겨울간식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화 건설부문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겨울철 대표 간식인 호빵과 어묵으로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간식차에는 근로자들을 응원하는 문구와 함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메시지도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월 말까지 현장별로 간식차를 순차 운영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현장에 간식차가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 건설부문 김우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장소장, 협력사 직원, 일용직 근로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근로자들은 현장 내 휴게공간에서 간식을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화 건설부문